

# 獨逸 産業化過程에 있어서 社會政策學派의 役割

尹 汝 德

招請研究員, Ph.D.(社會學), 農村社會研究室

- I. 序 論
- II. 經濟的·社會的 背景
- III. 國民經濟論과 歷史學派
- IV. 社會政策學會
- V. 結 論

## I. 序 論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회과학 이론이나 방법론을 접하게 된다. 사회학에서 예를 들면 구조기능주의론, 실증적 경험주의론,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한 비판이론, 그리고 최근에 남미에서 대두되는 종속이론까지이다. 이러한 이론들이 한편으로는 무비판적으로 사회과학 전반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이론에 맞추어서 현실을 보고, 분석함으로써 마치 어느 이론이 시간이나 공간을 떠나서 보편적 진리처럼 믿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어느 이론이나 방법론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는 “準理論”(Quasi Theorie)인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한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변동 과정에서 야기된 그 사회의 산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과학 이론이라는 것은

마치 공식처럼 적용하거나 문자를 해석해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대적, 사회적, 역사적 조건 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를 먼저 규명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접근은 어느 가정이나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맞아 떨어지는 결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변하는 진리처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들어섰고 여러 근대화 이론과 접했다. 근대화를 통한 민족자본의 축적과 경제질서 확립에 따른 국제 경쟁력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기반은 아직도 국제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서 국내 내수시장 또한 구매력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란 틀에서 볼 때 상당히 불투명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유럽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後發 資本主義 국가인 독일이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는 현 단계의 우리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비교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산업화 과정을 본다면 19세기 초반에 독일

은 영국이나 불란서의 산업화 과정에 비해서 뒤떨어진 사회였다. 그들은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한 고전 경제학을 낙후한 독일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들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민족주의적 경제이론을 추구했다. 이리하여 민족주의적 경제학파인 독일 역사학파가 생기게 되고, 그들은 역시 뒤떨어진 사회를 발전, 개선키 위해 자기의 논리를 전개했고 또한 그들의 역할은 당시 독일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이미 산업화가 끝나고 國家 獨占資本主義의 시대였기 때문에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 공업과 산업 노동자 문제였다. 註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7년에 이미 전체 인구 중 농업인구가 27%였다. 本稿를 쓰면서 느끼는 小農몰락 과정과 그들의 도시 빈민층 형성이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특히 사회정책학회가 제기한 농업문제에 대한 논쟁점은 자료 부족상 다음 기회에 보완해서 다시 쓰기로 한다. 우선 本稿에서는 그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고전경제이론을 어떻게 수용했고, 그들의 현실적인 산업기반을 어떻게 인식했고, 또한 논쟁했는가를 보는 데 있다.

## II. 社會的・經濟背景

19세기 전반의 독일은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투쟁시기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농업의 비중이 압도적인 시기였다. 19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했고, 인구의 4분의 3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는 농업과 농민문제가 바로 사

회문제 전체라고 할 수 있었던 때였다.

이 시기의 농촌에는 領主와 농민 사이에는 아직도 半封建的인 지배, 예속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18세기말부터 여타 가지의 농업개혁 정책은 농촌구조와 농민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1807년에 농민해방(Bauernbefreiung)<sup>1</sup>이 실시되어 농민의 영주에 대한 인격적 예속이 폐지되고 농민 보유지를 농민 소유지로 전환시키는 農地개혁이 강구되었다. 그러나 東 엘베강 지역에서는 새로운 농업입법에 의하여 농민의 소유지 변경에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되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농민은 제외되고 농민 보유지는 옹커(Junker)<sup>2</sup> 계급에 다시 회수되었다. 그 결과 東 엘베강 동쪽에서는 농민 부역에 의한 영주(Gutsherr)경영에 대신하여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옹커적 大土地經營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독일의 정치적 지배세력이 된 옹커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었다.

한편 農地개혁 이후 농민에게는 여러 가지 큰 부담이 나타났다. 임금상승에 비해서 폭가는 폭락됨으로써 小農民의 빈곤과 파산이 속출되었다. 다만 農民解放의 혜택이란 과거에 畜役을 납부할 수 있었던 大農내지 中農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小農은 국가상환에 고통을 받았다. 이에 소농은 다시

<sup>1</sup> Von Stein과 Hardenberg 재상의 뒤떨어진 독일사회 발전을 위한 개혁을 말한다. 이 內政 개혁은 “특수독일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혁명(1640), 프랑스혁명(1789)과 같은 市民革命에 대신하는 “위로부터”(von oben)의 혁명으로 이해하기로 했다. 즉 신분노예 관계에 의한 직업, 이농의 자유에 대한 제한, 領有, 保有 관계 및 공동체적 諸 관계에 의한 私有權의 제한, 토지 처분 및 이용의 자유 제한 등의 철폐를 단행했다. 또한 농민해방은 농민의 신분적 노예제도 폐지, 토지매매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공저 분할도 포함하고 있다.

<sup>2</sup> 19세기 중엽, 독일의 東 엘베강 지방의 대지주, 귀족을 일컫는 말. 이 계급은 1807년 Von Stein과 Hardenberg의 농지개혁 이후에 나타난 자본주의적 농업 경영의 소유자이다.

그들의 땅을 매매해야만 되었고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농촌에서 농업노동자가 되거나 도시로 이주하여 공업노동자가 되었다. 또 하나는 물가의 앙등에 비해 穀價의 폭락을 동반한 土地價 역시 하락세였다. 이것은 물론 農地 改革에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나폴레옹 전쟁에 의한 戰禍復舊의 부담과 이에 따른 과중한 조세에도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농업개혁 이후의 농촌은 달라졌다. “그중 특히 현저한 양상이 耕地造成作業이었다. 과중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으로 大農이나 옹커계급에 흡수되어 小農들의 農地는 감소되었다. 이 때문에 小農민에게 제시된 최후의 가능성이란 곧 公有地分割(seperation)과 農地개량과 경영개선에 달려 있을 뿐이었다.”<sup>3</sup> 農地造成은 또한 公有地에 속했던 草地나 不毛地를 개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英國에 대한 穀物 수출량이 확대되어 몰락했던 곡가는 다시 회복되었다.

그러나 耕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는 경영개선의 기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층의 분해 과정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대규모의 土地를 갖는 企業農主와 토지를 잃은 농민이라는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었다. 농민층 분해와 더불어서 農地개혁 후 특징은 農村人口의 증가였다. 1830년대에는 이미 한정된 범위를 넘어선 인구과잉 현상을 초래했다. 인구과잉은 주로 하층농민의 증가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충분한 자기 소유의 土地를 갖지 못함으로써 또한 小農의 위치에서 임금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농지개혁과 자유스런 경제정책의 결과로서 土地가 없고 사유재산이 없는 새로운 계층이 나타났다. 이러한 계층이 증가하면서 그들은 점점 무산자 계급화했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19세기 중엽까지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공업 역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없었다. 이들 임금노동자들은 과중한 노동에 시달렸다. 한편, 가중된 노동을 이용해서 임금노동자를 토대로 하여 농업의 資本主義는 독일에서 본격화되었다.

農地개혁 후 1830년까지 농촌을 떠나는 離農民<sup>4</sup>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산업화의 未熟, 大農 중심의 토지 집중화 과정 등은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케 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1848년의 3월혁명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1845년에서 1855년까지 10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수가 북미 남미 등지로 이민을 갔다.”<sup>5</sup>

그러나 농업개혁 이후에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의 증가, 人口의 증가, 資本축적의 여건을 갖추으로써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산업화의 前提로서 모순적인 사회질서의 해체는 필연적인 역사적인 추세였다. 인구증가, 생산의 증대, 보다 나은 생활개선을 위한 자본투자 면에서 본다면 당시 독일 사회가 선진한 영국이나 불란서와 비교 해서 긍정적인 면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19세기 전반의 공업상태는 농민해방(Bauern-freiung)의 결과도, 영업의 자유(Gewerbefreiheit)

<sup>4</sup> Peter von Blankenberg, *Einführung in die Agrarsoziologie*, Stuttgart 1962. p. 20 1800—1925년까지 전체 인구에서 농업인구

1800 (약)	75%	1895	33.5%
1850 (약)	60%	1907	27.0%
1882	39.9%	1925	22.8%

<sup>5</sup> Albert Müssiggang, *Die soziale Frage in der historischen Schule der Deutschen Nationalökonomie*, Tübingen 1968. p. 58—59 참조.

<sup>3</sup> W. Abel, *Agrarische und Agrar-konjunktur*, Hamburg 1966. p. 210 참조.

도 그 진행 과정이 매우 완만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농업적 성격과 수공업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영업의 자유에 따라 차차 길드制가 타파되고 새로운 기계공장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리하여 1840년대에는 어느 정도의 공업화가 서부 독일(Rhein-Westfalen)에서 급속히 발전했다.

1840년대에서 1860년대 사이의 천인구에서 농업인구의 비율이 70%에서 50% 이하로 저하했다. 이러한 것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의 과도기를 경과하는 사회지표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독일에서는 섬유공업과 같은 경공업은 질 좋고 값이 싼 영국의 상품 때문에 큰 발전을 꾀할 수가 없었다. 19세기 전반 독일은 경제적으로 「철과 석탄」의 시대로서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시대였다. 특히 1845년에서 1865년에 이르는 20년간의 철로연장은 6배로 신장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발달로 대기업이 출현했다.

185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혁명의 발전은 더욱더 수공업자를 몰락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생산양식을 도입한 공장제 경영과 경쟁, 또 물가의 상승에 의해서 더욱더 그들은 심각해졌다. 몰락농민들의 도시 이동이 낳는 사회문제에서 그들이 사회 저변층을 형성하고 룬펜생활에 의한 도시 빈민층 형성은 가장 큰 사회문제였다. 공장제 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이들 노동자층은 급격한 양적 증대를 가져왔다.

### Ⅲ. 國民經濟論과 歷史學派

독일산업화는 시민혁명을 통한 근대적 부르조아 계급의 사회변동이 아니었다. 당시 독일은

부르조아 계급의 세력기반이 약했고 상대적으로 강력한 봉건적 옹커 세력이 나타났다. 그들은 1807년 농지개혁 후 자본주의적으로 재편성된 정치세력으로 나타남으로써 독특한 발전의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신흥 산업자본가들은 봉건적인 세력인 옹커세력과 규합해야만 했다.

영국이나 불란서에서 산업화의 길은 부르조아 계급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정치·경제·사회등을 근대적 자본주의화하면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반해서 독일은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영국보다 70년이나 뒤떨어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도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은 첨예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자본주의 발달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를 낳고 특히 임금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세력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독일은 이와 같은 조직적 세력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능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내적 문제로 등장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적 요인과 외적으로서 이미 1830년을 전후해서 산업혁명의 완성으로 영국 상품은 독일 市場을 석권하고 있었다.

또한 불란서 혁명에 의해서 유럽전역에 영향을 준 정치·사회에 있어서 자유주의 물결은 아직도 봉건적 잔재가 팽배한 독일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한편 불란서 혁명세력에 의한 대륙봉쇄정책은 영국 상품 시장으로서 독일을 보호한다는 의미와 아울러서 영국을 고립시키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대륙봉쇄는 불란서 상품에 의한 대륙시장의 독점을 위한 것이고 독일을 위해서 취해진 조치는 아니었다. 후에 대륙봉쇄가 풀렸을 때는 영국의 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와 아직도 산업기반이 취약한 독일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독일은 낙후한 경제질서와 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는 영국이나 불란서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 때문에 국가권력이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를 보호 육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東 엘베 지역의 북쪽 지역의 옹커 계급들은 自由貿易을 찬양하였다. 새로운 정치, 경제분야에 막강한 세력을 구축한 그들은 기업화한 大農場을 경영했고 자유무역에 의한 농산물을 高價로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선진 공업국에서 중계상업을 통해서 이득을 본 小브르쵸아 계급도 자유무역에 가담했다.

당시 독일의 여건 하에서는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自由放任主義에 따라 자유무역정책을 취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낙후한 독일 경제가 자유무역정책 하에서 선진제품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나타난 것이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論이다.

리스트는 정치적 경제적 국가통일(die politisch ökonomische Nationaleinheit)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통찰력에 따른 이론적 방법은 독일 특유의 낭만주의 사상에서 출발했다. 낭만주의는 非合理的, 超個人的 힘에 대해서 畏敬하여 개인을 초월하는 민족공동체의 존재를 강조했다. 그는 고전경제학을 자유로운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집합이 그대로 국제사회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을 “뿌리가 없는 세계주의”(der bodenlose Kosmopolismus)라고 비판했다.<sup>6</sup>

그의 국민 경제학의 중심은 국민생산력論(Theorie der Nationalproduktivkräfte)이다. 그에 의하면 생산력은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諸 힘에서 뿐만 아니라 그 처해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민경제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력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리스트의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주장은 그 후 역사학파에 큰 영향을 주었다.

“1840년대에 사회적인 빈궁이 극에 달했을지라도 당시의 경제제도가 자유경제 이론에 의했기 때문에 어떤 是正策(Abhilfe)의 가능성을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태는 산업화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단순한 과도기적인 어려움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었다.”<sup>7</sup> 여기에 자유경제 이론으로는 사회적인 여러 폐단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경제 학자들이 舊역사학파를 이루었다.

舊역사 학파는 Wilhelm Roscher(1817~1894), Bruno Hildebrand(1812~1886) 그리고 Karl Knies(1821~1898)를 대표로 하여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역사적 관점을 계승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역사적 연구 방법을 확립했다. 그들은 당시 독일의 상황이 선진공업국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 역사적 조건 하에 놓여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했다. 그들은 국민경제학이 추상적이고 연역적이 아닌 역사적이고 귀납적으로 국민경제의 특수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모든 社會에 보편 타당한 경제이론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칼 크니스(Karl Knies)도 국민경제는 역사적 변동과정에서 시간과 경제주체로서 국민성을 초월한 절대적 경제이론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고전경제 이론의 뿌리없는 세계주의(der bodenlose Kosmopolismus)를 비판했고 시간과 공간의 상충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안했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국민경제의

<sup>6</sup> Albert Müsiggang, វិវេក p. 78-79 參조.

<sup>7</sup> Albert Müsiggang, វិវេក p. 81 參조.

역사적 방법론을 발전시키는데 몰두했다. 국민경제학의 임무는 경제적인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이론의 궁극적인 극복과 싸움에 있다고 했다.<sup>8</sup> 또한 그는 일상생활의 경제적인 결정에서 利己心(Egoismus)은 추진력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인간은 생활의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종류의 노력으로 이끌리게 된다고 한다. “인간의 모든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교육요소(die sittliche und geistige Bildungselement)는 언제나 통일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고 또한 작용한다”고 했다.<sup>9</sup> 그러면서 사유재산과 利己心(Egoismus)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고 보편적이며 영구한 것이라고 한 점을 비판했다. 그에 의하면 사유재산은 시간의 변화와 더불어서 가치의 변화가 생기고 이기심 또한 합리적인 사회 정책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했다.

비슷한 역사적, 사회적 상태를 비교해서 因果關係를 찾아서 理論을 정립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은 방법은 諸現象과 현상을 비교한 類似性(Analogie)이지 同一性(Identität)은 아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타당한 것으로 이끌려고 하는 유사성의 법칙(die Gesetze der Analogie)은 어떤 절대적인 價値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은 곧 구체적인 현존관계(Gegenwartsverhältnis)에서 생기는 것처럼 조건과 제한 아래서만이 타당하다<sup>10</sup>

또한 객관적인 요인에게는 역사적, 사회적 또는 國民性的의 차이가 있다. 그 때문에 인간의 일상생활에서의 경제행위도 이러한 차이에서 국민경제의 특징이 형성된다. “이렇게 작용된 상대

성의 원리(Prinzip de relativität)는 국민경제 정책의 여러 가지의 경제제도나 여러 가지의 조치(Maßnahme)의 상대적인 전제를 요구한다”<sup>11</sup>고 했다.

19세기 전반기의 독일의 산업화 과정은 선진한 영국에 비해서 70년 가까이 늦게 출발했다. 영국의 선진한 산업화의 물결이 당시 독일을 휩쓸고 있었고 불란서 혁명 후 그 혁명군에 의한 자유주의 물결은 아직도 시민혁명을 거치지 못한 당시 독일의 봉건적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807년의 농민 해방을 통한 농지개혁 후 새로운 신흥지배 계급인 용커계급이 생기면서 영세농의 몰락을 가져온다. 당시 몰락한 그들은 농촌을 떠나서 도시 수공업 지대로 물리게 된다. 뒤떨어진 산업화를 빨리 추진시키기 위하여 여러 경제제도, 질서를 개혁하면서 가내수공업은 공장제 산업으로 바뀌고 또 몰락한 가내수공업자들은 도시에 몰려든 빈민 계층과의 만남은 1848년 3월혁명의 한 요인이 된다. 빠른 시간내에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한 산업화를 추진시키기 위한 당시의 독일의 경제, 사회정책은 많은 사회의 불균형을 낳게 되고 사회문제가 점점 산업과 노동문제로 귀착되었다.

특히 1848년에 있었던 3월혁명은 노동자의 都市貧民化를 심화시켰고 혁명적 사회주의 기풍이 풍미했다. 이와 같은 때에 독일의 舊역사학파는 자본주의를 지키고 社會主義에 맞서야 했다. 그들도 역시 당시의 여러 사회문제를 간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도 고전경제 이론의 자유

<sup>8</sup> Albert Müssiggang 著 책 p.101 참조.

<sup>9</sup> Karl Knies, *Die politische Ökonomie vom Standpunkt der geschichtlichen Methode*, Braunschweig, p.317. 재인용, Gottfried Eisermann, *Die Grundlagen des Historismus in der deutschen Nationalökonomie*, Stuttgart, 1956. p.200 참조.

<sup>10</sup> Karl Knies, *Die Wissenschaft der Nationalökonomie*, in; *Die Gegenwart* Band 7. 1852. p.54. 재인용, Albert Müssiggang, 著 책 p.113 참조.

<sup>11</sup> Karl Knies, *Die politische Ökonomie vom geschichtlichen Standpunkt*, Braunschweig 1883. p.356. 재인용, Albert Müssiggang, 著 책 p.113 참조.

주의적 타당성을 비판하고 역사적, 정치적 제약 아래서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더 급급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급속히 번지고 있는 사회주의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사회정책을 바탕으로 한 資本主義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新역사학파가 등장하고 그들에 의해서 1872에 사회정책학회(Verein für Sozialpolitik)를 구성했다. 이리하여 역사학파에 의해서 사회문제 해결과 방법론에 의한 논쟁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新역사학파는 중도파인 구스타브 스몰러(Gustav von Schmoller 1838~1917), 보수적 개량파인 아돌프 바그너(Adolf Wagner 1835~1917)와 자유주의적인 개량파인 루조 브렌타노(Lujo Brentano 1844~1931)로 대표된다.

### Ⅲ. 社會政策學會

1871년 獨佛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 여세를 몰고 비스마르크(Otto Bismarck 1815~1898)는 獨逸 통일을 실현한 후 급속한 공업국가로 발전시켰다. 이리하여 공업, 농업 전반에 걸쳐서 경이적인 발전을 했고 그 이후 독일의 산업은 국가 독점 資本主義로 이행되었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은 여러 사회적 모순을 야기시켰다. 중산계급의 몰락으로 사회적 계층은 양극화되었고 도시빈민층을 형성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社會主義운동이 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하에서 獨逸의 新역사학파는 資本主義를 유지하면서 국민경제 발전을 꾀했고 資本主義의 모순점을 개량하는데 社會政策學會의 목적이 있었다.

“新역사학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학회의 기

본 목적은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sup>12</sup> 즉 양편을 모두 반대하고 독일적인 특유한 학설과 정책을 주장했던 것이 독일 新역사학파의 경제이론이다. 그들은 국민경제학을 道德的 社會科學으로 인식했다. 또한 고전경제학파가 경제생활을 自然法則적으로 이해하려는데 반해서 倫理的, 역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동자문제도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사회정책의 정신은 윤리적 요구와 정치적 권력에 대한 욕구의 타협이며 또한 사회정책은 윤리적이고 利他的인 사회와 利己的인 정치와의 양자 결합인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정책은 본질적으로 어떤 절대적 理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각 시대에 특유한 理念과 결합해서 상호작용(Interaktion)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경제, 사회 전반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아돌프 바그너(Adolf Wagner)는 주장했다. 그의 국가 사회주의(Staatssozialismus)는 사회개혁을 위한 국가의 과감한 조치를 뜻한다.<sup>13</sup> 당시의 新역사학과 경제학자들은 Hegel 이 국가는 하나의 自意識되고 倫理的인 關係當局(die selbstbewußte sittliche Instanz)이라고 한 개념에 큰 영향을 받았다.

#### 1. 社會問題에 대한 社會政策的 立場

19세기초 독일농민해방은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에 변혁을 가져와 사실상 산업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1850년까지 가장 큰 사회문제는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사회문제를 유발하

<sup>12</sup> Hans Schmidt, *Staatssozialistische Bestrebungen in Verein für Sozialpolitik*, Köln 1941. p. 23. 참조.

는 농민문제였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화의 추세는 격심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당시의 국민경제학자들은 “사회문제가 사회적인 理念과 이미 존재하는 현실과의 不一致의 결과이며 이러한 不一致에서 야기된 사회적인 긴장은 사회적 평화의 안녕과 재건, 그리고 민족과 국가존립의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 이유에서든지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다.<sup>14</sup>

이리하여 바그너(Adolf Wagner)는 사회문제를 하나의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파악하면서 그의 특유의 국가사회주의(Staatssozialismus)를 주장했다. 즉 국가의 제도와 보험정책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며, 국가 및 여러 사회 이익단체가 중요산업을 경영하고 租稅制度를 개혁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제거해서 사회문제 해결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슈몰러(Gustav Schmoller)는 사회정책의 주체가 윤리적인 국가, 훌륭한 君主, 관리이고 이들이 직접 중산층을 움직여 사회개량주의적 理念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국가는 몰락과정에 있는 농촌의 小自營농민과 도시의 수공업자, 특히 근대적 숙련 노동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는 달리 브렌타노(Lujo Brentano)는 사회 개량의 기본을 노동자 단결의 자유에 두었다. 그는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을 통해서 생존하는 노동자들은 지위를 개선키 위해서는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서만이 생존권적 임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구성요소라고 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구조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관계는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경제구조에 대한 부분적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 수정의 가능성이 경제의 합법칙성에서 도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윤리의식으로 대치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회정책의 바탕을 이루는 경제이론이 가끔 윤리화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관계 그 자체가 윤리적 관계로 이해되었다. 즉 그들은 경제문제의 중심문제가 물질적 생산관계의 분석에서 윤리적 분배관계의 代案으로 이루어졌다고 전제, 分配正義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기본목표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반 위에서 분배 면에 있어서 부분적 수정을 목표로 하는 사회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즉 분배정의를 목표로 삼는 사회정책이 사회주의 운동의 진압정책의 일환이기도 했다. 국내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되고 노동조합도 그들의 조직이 방해해졌다. 그 때문에 분배정의의 사회정책은 정부측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기업가 사이의 조화를 뜻하는 편이기도 했다. 사회정책은 분배문제를 둘러싼 노동자와 기업가간의 이익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안정된 산업기반의 발전과 사회의 조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정책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적 하에 생성, 발전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자본주의 발전이 그 자체 내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보기도 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그 발전과 더불어 생산적 노동력의 필요한 양과 질을 확보해야만 한다. 사회정책의 발전은 이러한 이유에서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노동력의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sup>15</sup>

따라서 사회정책이 자본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생산적 관

<sup>13</sup> Hans Schmidt 著, p. 16 참조.

<sup>14</sup> Albert Müsiggang, 著, p. 4. 참조.



계와 분배적 관계를 동시에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배 정의에 따른 사회정책이 특히 독일에서 1870년과 80년 사이에 강조되었던 것은 그 역사적 현실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당시 독일자본주의는 해외의 식민지 경쟁에 나서기에는 아직 열세에 놓여 있었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국내의 노동자 불만과 이에 따른 사회주의적 과격분자들을 크게 의식했다. 즉 그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서 반영된 국가 이데올로기적인 반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발전되며 생산적인 것과 분배적인 것의 강조가 따를 수 있고 교묘한 조화의 발전을 꾀할 수도 있는 것이다.

## 2. 정부와 기업간의 논쟁

3년 동안의 독·불간의 전쟁 후에 비스마르크는 신흥지배계급, 즉 관료, 군대, 토지자본가 및 신흥기업가들의 도움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했다. 그후 전쟁배상금을 받아 모두 사회개발, 특히 새로운 공업에 투자했고 기업은 대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노동력이 대기업에 집중되게 되었고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나 노동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기업경영에 참여를 요구했다. 또한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자들이 가세되어 사회는 극도로 혼란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정부는 1878년에 “사회주의자 탄압법(Sozialistengesetz)”을 선포하고 모든 사회운동, 노동운동에 대해서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여러 방법으로 당시의 노동자제급을 설득했

다. 당시의 사회보장제도의 근본목적은 사회적 인 병폐의 치유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의료보험법, 산재보험법, 불구보험법 그리고 노인복지 보험법을 선포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이와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社會立法은 의도나 효과 면에서 여러 사회운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불가능했다. 노동조합, 사회민주주의자 그리고 가톨릭교회 정치가에 의해서 촉진하는 사회개혁은 노동자보호, 노동조건 개선과 직업에 대한 보장, 노동시간의 규정, 그리고 산업민주주의였다.<sup>16</sup>

다른 한편으로 많은 새로운 기업들 또한 여기에 반대했다. 비스마르크 자신도 국가자본주의 화해서 제국주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때에 독일 상품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염려했다. 그러나 그는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을 특정 개인 집단이나 기업의 문화이념(Kulturideal)에 두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대중의 보호이득에 두었다. 그의 사회정책은 “국가전위적인 사회정책”(Die staatsautoritäre Sozialpolitik)이라고 특징 지을 수가 있었다.

1896년 사회정책학회의 국민경제학자들이 개인의 안녕과 복지보다 국가지상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해서 과격한 개혁을 추구함으로써 정부와 기업간의 갈등이 심해졌다. 이리하여 기업과 자유주의 경제를 추구하는 독일 만चे스터학파(Das deutsche Manchesterstertum)는 당시 사회정책학회 국민경제 학자들을 이상주의적 講壇社會主義者(Kathedersozialisten)<sup>17</sup>라고 했다.

정부도 이들이 건의한 사회개혁에 대해서 전혀 국가적인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들

<sup>16</sup> Dieter, Lindenluh, *Richtungskämpfe im Vevein für Sozialpolitik Teil 1*. Wiesbaden 1967. p. 83 참조.

<sup>17</sup> Hans Hemmer/Wolfgang Hindrichs, Nicht Stillstand sondern Fortschritt in der Sozialpolitik soll unser Kampf sein, in;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7/81 Köln 1981. p. 403. 참조.

은 내적으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분리시키는 것이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대열에 참여시키기 위한 경제발전이었다. 한편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대학강단에서 학문적인 사회개혁에 따른 농업정책, 공업정책 개혁의 과격한 요구에 크게 흔들렸다.<sup>18</sup>

당시 국민경제 학자들이 자유스런 학문연구를 통한 사회개혁을 요구할 때는 시기적으로 독일이 국가자본주의화한 후 제국주의 식민지 시장에 나서게 되는 때였다.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의식한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 문제보다도 우선 국가 발전을 위한 과도한 생산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북부 항구도시 함부르크를 중심한 부두노동자들의 쟁의가 격화되어 국가자본주의화한 기업의 횡포와 대립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가 측면에서는 사회정책학회의 국민경제학자들을 사회주의자로 몰아 세웠다. 그들은 계속해서 “개혁적 사회정책 없는 경제발전을 전제로 해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sup>19</sup> 그들은 또 이와 같은 간격을 없애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해서 사회정책학회 국민경제학자들과 기업가 사이에는 논쟁이 계속되었다. 기업가들은 노사문제에는 큰 갈등이 없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즉 기업가들은 노동자 문제를 하나의 자선적 임무로서 취급하려고 했고 반면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강단사회주의자

들은 법적 보장을 통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

### 3. 국민경제 인식논쟁

후기 역사학과내에서 방법론 논쟁은 특히 Carl Menger 와 Gustav Schmoller 의 1883—1884년 사이에 일어난 다음과 같은 논쟁에서부터 시작했다. 즉 경제학이 자연과학과 같이 정확하게 자연과학적인 방법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귀납적 방법이어야 하는가, 추상적 방법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경험적 방법이어야 하는가의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은 마침내 사회정책학회 내에는 물론 전 국민경제학, 사회학 등 모든 분야에 해결되어질 수 없는 사회과학 방법론 논쟁으로 비약했다.

Gustav Schmoller 에 의하면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자연질서를 정복하려는 측면과 윤리적이고 역사적인 사회질서를 의식해야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경제학은 자연적인 질서의 파악, 합리적인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마땅히 사회윤리적인 감성으로 가치판단을 기준해서 전통적인 관습, 도덕, 윤리성을 아울러서 탐구해야 한다. 이리하여 그는 사회과학 전반의 방법론에서 사회적 윤리적 가치판단을 정당화했다. 그의 윤리적 가치판단(das sittlich Werturteil)은 모든 인과관계에서 생긴다. 즉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그 각각이 심리적인 경험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인식의 형성에 아무 비관없이 작용한다는 것이다.<sup>20</sup>

그러나 Carl Menger 는 국민경제학이 국민경제 현상의 궤법칙과 현 상태를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sup>17</sup> 1872년 신역사학과 멤버중에서 사회정책학회(Verein für Sozialpolitik)에 참여했던 국민경제 학자들을 이상주의자,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경멸적 의미로 불리는 칭호이다. 특히 자유주의 경제학을 추구한 독일 맨체스터 학파의 Oppenheim에 의해서였다.

<sup>18</sup> Dieter Lindenlaub, *옛책*, p. 56 참조.

<sup>19</sup> Dieter Lindenlaub, *옛책*, p. 67 참조.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경제현상의 마지막 요소까지도 찾아서 그 본질성(Wesenheit)으로부터 公理(Axiom)을 유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前提(Prämisse)를 위해서나 법칙(Gesetze)을 위해서 경험적인 현실(Realität)에 대해 음미, 再考(Über-prufung)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경제학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學으로 발전해야 한다. 때문에 국민경제학이 사회적, 윤리적, 역사성과 같은 비과학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판단은 상대적 개념에서 도출되는 가치기준이므로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는 과학적 입장과는 무관하며, 이와 같은 가치판단은 그 인식자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여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Gustav Schmoller는 역사와 국민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역사적 현실을 국민경제에 필요불가결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고, 현실 속에서 정확한 인식이 인과관계(Kausalität)의 인식으로 여겼다. 그는 또한 자연과학에서 과학적으로 원인과 이유 등을 규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과학에서는 단지 제한된 범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겼다. 즉 어떤 규칙성(Regelmäßigkeit)을 얻는다는 것은 통계적인 대량 관찰로서 학문적으로는 가능하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 때문에 경험적 법칙(empirische Gesetze)은 원인 규명의 불완전성(Ünvollendetheit der Ursachenforschung)을 한편으로는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즉 Gustav Schmoller가 얻으려고 하는 법칙은 현

상위에 배태되어 있는 본질구조(Wesensstruktur)의 법칙이 아니라 경제현상의 법칙이었다.<sup>21</sup>

사회과학이 역사적 현실이 고려되는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과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과학적 방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논쟁에서 진일보 발전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자의 가치판단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것은 Max Weber가 Gustav Schmoller의 윤리적 가치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ustav Schmoller는 윤리적 진화주의에 입각해서 전체의 복지이익에 기여키 위해 윤리적으로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Max Weber는 사회과학에서는 다만 여러 가지 사실의 연계나 연관만을 규명해서 밝힐 것이지 실천적 인가치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는 沒가치성(Wertfreiheit)을 주장함으로써 사회정책 학회내에서 다시 불붙는 논쟁이 벌어졌다. 말하자면 Weber는 경험적 사회과학으로서 국민경제학은 존재 그대로의 현실(Sein)을 분석하는 존재과학이지, 존재해야 할 것(Sollen)을 주장하는 당위과학은 아니므로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실천적 가치판단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과학적 인식(Erkenntnis)과 가치판단(Wert Urteil)은 구별되는 것이며, 그 자체를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 과학의 沒가치성이란 가치판단과 실천적 평가가 같다는 데서부터 과학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바꾸어서 말하면 과학으로부터 가치판단과 실천판단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Max Weber의 沒가치성(Wertfreiheit)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 아래서 국민 경제학의 토착적 이론 방법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었다고 볼 수 있

<sup>20</sup> Christian von Ferber, *Der Werturteilsstreit* 1909/1959, in; Ernst Topitsch, *Logik der Sozialwissenschaften*, Köln 1976, p. 172 참조.

<sup>21</sup> Dieter Lindenlaub, *wert*, p. 101-103 참조.

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방법론 논쟁에서는 또 한 꼭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오늘날 사회적인 경험은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관찰, 인식되고 계량적으로 파악된다 해도 그것은 상호주체적(Intersubjekt)인 경험으로서 이미 언어적인 상징을 통해서 해석된 경험이다. 그 때문에 모든 경험은 이미 해석된 경험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해석에는 언제나 가치판단이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V. 結 論

독일의 역사학파는 낙후된 독일의 산업을 근대화하는 작업에 정신적, 이론적 기여를 했으며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부수된 사회문제 및 노동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1880년을 전후하여 비스마르크 체제 하에서 급속히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이행되면서 강력한 대외무역 정책과 국내 산업의 안정이 요구되었다.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강력히 반영되었던 역사학파의 이론도 비스마르크의 사회주의 탄압법(Sozialistengesetz)의 폐지와 더불어 그는 실각되었고 신역사학파도 그들의 지지기반을 상실하였다.

신역사학파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적 문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내 국외에서 오는 경제적 여건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이론연구를 소홀히 했다. 그들은 경제질서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노사협조체제를 강조했다. 즉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회정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 1차 대전이라는 제국주의 팽창에 의한 경제질서의 모순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지 못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정책 학회내에서 방법론 논

쟁과 가치판단 논쟁은 내부에서 해체 과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들은 고전경제이론에 반대하고 독일적 특유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들의 사회정책적 이념은 그 후 바이말 공화국이 내재하고 있는 이상적 국가이념과 세계 경제의 대공황에 따른 시련 속에서 그 빛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정책적 이념은 분배정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경제의 실현이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안정을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족국가 발전을 추구하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論理도 당시 선진한 영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사회를 발전시켜서 선진한 제국주의 대열에 끼는데 목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비스마르크의 사회 보장제도도 불탄서와의 전쟁에서 얻은 배상금이 기반이 되었고 그후 국가 독점 자본주의화할 때는 뒤늦게 해외 식민지 시장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얻은 국가 이익은 또한 역으로 국내 사회정책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독일의 역사학파는 그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었다. 즉 고전경제이론을 그들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자기 입장의 논리로 전개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안으로부터의 사회문제 해결과 밖으로부터의 국력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독일 역사학파의 그 시대적 역할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른 여건에 처해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여러 사회, 경제적 여건 하에서 한 번쯤 눈여겨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뒤떨어진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外國의 사회과학 이론을 받아들이는 데 그 수용적 기반을 타진하면서 국민경제 전반을 육성시켜서 민족국가의 확립

에 기여한 점은 오늘의 우리에게 중요한 사례가 되지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그들이 시간적, 공간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보편적 이론은 확립하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그들 현실에 접목시키고 토착화시키는 과정에서의 끊임없는 논쟁들은 그들이 자주적인 경제원리나 경제질서 확립이 얼마나 민족경제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점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Max Weber의 理想型(Idealtypus)에 따른 沒價值論(Wettfreiheit)은 Friedrich List에 의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출발해서 Adoif Wagner에서는 국가가 국민경제에 주도적 역할을 주창하는 국가주의 사상을 발전시킨 후, 그들 산업기반이 확립되면서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볼 때 보편적이고 독일적인 방법론의 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의 沒價值論은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하나의 paradigm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 參 考 文 獻

- Albin Gladen, *Geschichte der Sozial-Politik in Deutschland*, Wiesbaden, Wiesbaden 1974.  
 Christoph-Tennstedt / Florian Tennstedt, *Geschichte der Armenfürsorge in Deutschland*, Stuttgart, 1980.  
 Dieter Lindenlaub, *Sozial- and Wirtschaftsgeschichte Teil II*. Wiesbaden, 1967.  
 F. W. Henning, *Landwirtschaft and ländliche Gesellschaft in Deutschland Bandli*, Paderborn, 1978.  
 Hans-Ulrich Wehler (Hg.), *Moderne deutsche Sozialgeschichte*, Köln, 1976.  
 Peter Kriedt, U.a., *Industrialisierung vor der Industrialisierung*, Göttingen 1978.